

민주당 정권, 노동현장 분쟁 내모는 노동법 개악

환노위 단독 개최, ILO 기준 권고 무시·과로사 제도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무시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악 안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동법, 교원노동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안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환노위는 애초 정부 개정안에 들어있던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라는 해석이 불명확한 단서를 살렸다. 법을 개정할 경우 사업주가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악용할 조항을 남겼다.

환노위는 정부가 제출한 쟁의권 제한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노



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노조법 37조 3항을 신설했다.

투쟁으로 일부 개악 저지 성과

금속노조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악 안을 "불필요한 내용이 살아있는 개악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개정안은 내년 단체교섭부터 쟁점으로 떠오르며,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를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조 조합원을 일시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조법 2조 4

항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대한 삭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제도 삭제 요구도 무시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 노사관계를 기업별 노사관계로 돌리거나 고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권이 노사관계를 자율성 원칙에 따라 풀도록 유도하지 않고, 통제와 규율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라며 "개발독재 시기 억압 위주의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한 사실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도 9일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확대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 비정규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개악 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2월 10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 안 통과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LG는 왜 한국산연 먹튀 일본 기업과 계속 거래하는가”

한국산연 대책위, LG-산켄전기 거래 중단 촉구 ... 일본 노동·시민단체, 산켄 규탄 행동 확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와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아래 대책위) 12월 8일 LG전자 창원 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는 산켄전기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켄전기는 지난 2017년 한국산연 생산직 전원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생산재개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2018년 LG와 산켄전기는 각각 지분 49%와 51%로 합작회사 어드밴스 파워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만

대책위는 “LG는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노동탄압과 불법, 위장폐업을 일삼는 일본기업과 거래하며 부품독립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LG는 산켄자본이 저지르는 악행을 알고도 합작회사를 만들고 부품을 받고 있다”라며 “LG가 산켄전기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LG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8일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의 경남 대표자들이 한국산연지회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산켄전기는 고의로 적자를 내고 한국산연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은 LG가 돈벌이에 혈안이 돼 산켄전기 같은 먹튀기업을 내버려 두는 행태를 막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지 다섯 달이 돼 간다”라며 “LG는

이 땅에서 먹튀 자본 산켄전기를 보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산켄과 거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위장폐업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회, 산켄전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혐의 제소 예정

한편, 일본에서 산켄전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켄전기 본사가 있는 사이타마현 시민들과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에서 산켄전기 규탄 행동을 벌이고 있다.

산켄전기와 LG는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다. 산켄전기는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태홍 한국산연 사장은 LG 출신이고, 이전에 사장을 지낸 두 명도 LG 출신이다.

들었다. 이 회사는 산켄전기가 LG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세운 연구개발사업소로 알려져 있다.

산켄전기는 최근 LG 구본준 부회장의 장남인 구형모 씨가 최대주주이던 EK(옛 지흥)의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EK가 지분을 정리하자, LG그룹 계열사 분리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K는 LG그룹 내부거래로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으며, 재벌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회사다.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 7월 한국산연 해산과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통보했다. 한국산연은 2021년 1월 20일 폐업한다고 공고했다. 일본 노동,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21일 ‘한국산연노조와 연대하는 사이타마 시민모임’을 만들고, 9월 3일 ‘한국산연 노동조합 투쟁을 지원하는 공동투쟁조직’으로 확대했다. 9월 10일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매일 저녁 한국산연 퇴근선 전전에 참석해 청산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지노위, “대우버스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두 지회, 기자회견 열고 공장 정상화 집중 교섭 요구 ... “백성학, 진심으로 노동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일대
우상용차(대우버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금속노조
와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대우버스사무지회는 백성학 영
안모자 자본가 일가의 난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
다.

울산지노위는 12월 4일 부당
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대우버스 노
동자 355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지
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은 기각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지회들
은 12월 7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대우버스 355명 부당해고 판
정, 지금 당장 공장을 돌려라’
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지회는 “자본가들은 코로

나 19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거리로 내
몰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대
우버스를 포함해 부당해고를 자
행하는 모든 기업을 특별근로감
독하라”라고 촉구했다.

지회들은 백성학 영안모자 회
장에 ▲지노위 판정에 따라 부
당해고 즉각 철회 ▲진정성 있
는 사과와 공장 정상화 ▲신속
한 조업 재개를 위한 집중 교섭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2월 7일 성명을
통해 “대우버스 정리해고는 경
영상 긴박한 요건은 애초에 없
었고, 정리해고를 위해 억지로
별인 자해경영은 누가 봐도 부
당하고 기이한 행동이다”라며
“즉각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여
공장을 가동하라”라고 촉구했
다.

대우버스 대표이사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지난 3월 30일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를 선언
하고, 베트남 이전을 추진했다.
백성학은 이 과정에서 이미 체
결한 버스 공급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구
매해 달라고 고객사들에 요청했
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더니, 급기야 추
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 사실
상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대우버스사무지회와 대우버스
지회는 부당해고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며 울산공장에
천막 40여 동을 세우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 조합원들은 국
회 앞 농성은 물론 노동부와 국
토부, 산자부 등 관련 기관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
쟁해 왔다.